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특혜 덩어리”

정동영 의원, 월 임대료 39만원엔 대학생 알바비 57%·29세 이하 비정규직 월 임금 34%... “공공 추진을”

서울시가 저임금과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을 위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며 토지 소유주와 건물주에 토지용도변경, 용적률 상향 특혜를 몰아주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이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했지만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은 대학생 평균 알바비 68만원 기준 55%, 29세 이하 비정규직 월 임금 기준 33%에 해당하여 청년 주거 안정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경실련과 공동으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3개 지역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에 대한 협약서'를 분석한 결과 20㎡ 이하 1인 단독 역세권 청년주택의 평균 임대보증금은 약 4,200만원, 월 임대료 39만원으로 대학생 평균 알바비 68만원의 57%, 29세 이하 비정규직 월 임금의 34%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문가들은 월 소득 대비 주거비가 25%를 넘으면 국가의 책임이라 판단하고 주거비 지원대상으로 삼는다.

정동영 의원은 “저임금,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을 위한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이 정작 대학생, 비정규직 청년들을 외면하고 있다”며 “누굴 위한 청년주택 사업인가” 지적했다.

정동영 의원은 2016년 국정감사 당시 “3종 주거지인 삼각지와 중정로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추진 이후) 각각 상업용지와 준주거로 변경돼 막대한 특혜를 받게 된다”며 “정책 발표 이후 해당 부지 주변 토지 가격이 급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토지를 서울시가 매입해서 청년주택을 토지임대부 건물분양으로 공급할 경우 서울시는 4천억 원의 개발이익을 거두고, 청년들은 월 20만원 이내 안정



“오늘은 한글날”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571돌 한글날 경축식에서 어린이합창단이 태극기를 흔들며 ‘한글날 노래’를 부르고 있다.

적인 주거가 가능하다”며 공공 주도의 ‘토지임대부 건물분양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토지가) 서울시의 사유지라면 토지임대부를 하기 쉽지만 모두 민간토지이기엔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정 의원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정 의원은 “마포구 역세권 청년주택은 2016년 미래에셋이 이랜드그룹에 960억 원을 지불하고 매입한 토지에 추진했다”며 “민간에서 사업성이 있다 판단한 사업을 서울시가 직접 추진하지 않고 민간에 내줬다면 이것이 특혜 아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정동영 의원은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토지용도변경, 용적률 상향, 저금리 대출 등 각종 특혜를 몰아줬다”며 “심지어 전체 2,558세대 중 2,011세대(78.6%)는 의무임대기간(8년·12년)이 경과하면 분양전환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각종 특혜를 몰아준 청년 주거복지 사업의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저소득 청년들을 착취하는 수준”이라며 “청년주택 사업자에 역세권 개발로 인한 토지가격 상승과 세대당 50만원의 고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어떻게 청년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인가?” 반문하고, 감사원과 국토부의 조사를 촉구했다.

김관영 “국외여행자보험 손해율 40%”

여행자보험 상품의 손해율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 여행자보험 상품이 국내 여행 보험 상품에 비해 손해율이 30%가량 더 낮았다.

8일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2014년부터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국내 15개 손해보험사가 판매한 여행자 보험의 손해율을 분석한 결과 국내 여행보험상품의 평균 손해율은 64%로 나타났고, 국외 여행 보험 상품의 평균 손해율은 40%로 나타났다.

“보험다모아”에서 보험상품을 비교해 본 결과 9개의 국내 여행자 보험 상품의 가격 차이가 최소가격 대비 최고가가 4.5배 이상 차이가 났다. 보장 담보의 종류도 5종에서부터 13종까지 크게 달랐다. /김진성 기자

민주당, DJ 노벨상 취소 청원 모의... “반역행위”

‘MB 국정원 개입’ 검찰 수사·강력한 처벌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9일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취소 청원 모의에 개입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일종의 반역행위”라며 검찰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보수단체와 손잡고 김 대통령의 노벨평화상을 취소해달라는 공작을 벌인 정황이 드러났다”며 “참으로 충격적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은

개인의 영예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국가적 영광이었다고 할 것”이라며 “대체 국가기관을 통해 민주질서를 유린하고 국익을 분산시킨 이명박 정부의 끝은 어디인지 개탄스럽지 그지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대표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로 다시는 국가분란이 없도록 기강을 바로 세워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관련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명박 정부와 국정원은 평생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평화통일에 앞서는 전지

대통령의 명예를 욕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김 대통령이 노벨평화상 수상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모범으로 세계 속에 우뚝 솟은 것을 부정하려고 한 일종의 반역행위에 가까운 짓을 저지르려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특히 국정원과 모의한 이 보수단체는 김 전 대통령 서거 직후부터 악의적 논평 내거나 노벨평화상 수상에 공작 거래 있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점에서 국정원이 야당에 대한 정치공작 차원에서 장기간 보수단체를 이용해 일련의 공작을 벌인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뉴시스

국감 시즌 돌입... 법조 쟁점은?

긴 추석 연휴를 끝낸 법원과 검찰, 헌법재판소가 국감 시즌 테이블에 앉았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13일 헌법재판소 ▲16일 법무부 ▲20일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23일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27일 대검찰청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대법원 국감에서는 사법부 개혁이 화두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현재 국감에서는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슈가 다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국감에서는 주요 사건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특히 국감이 열리는 20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가 결정된 이후인 만큼 재구속의 필요성과 부당성,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두고 격론이 오갈 전망이다.

23일 열리는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 국감 역시 상황이 만만치 않다. 국정원 댓글 사건 등 전 정권을 향한 수사가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국감 키워드는 ‘검찰 개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뿐만 아니라 법무부 탈검찰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개혁과 관련된 현안 등이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뉴시스

비위 경찰 징계부가금 납부 30% 미만

경찰의 징계부가금 징수율이 30%에도 못 미치고, 미납액은 11억원 이상 누적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 서울경찰청 미납액만 약 8억원으로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징계부가금은 공무원이 경품·항응수수, 공금횡령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 징계처분과 별도로 수수·유용 금액의 5배 이내에서 부과되는 제도로 2010년부터 시행됐다.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7년 8월까지 경찰공무원에게 부과된 징계부가금은 총 16억 16만1천원인데 그 중 4억 7,572만1천원 납부해 징수율은 29.7%에 그쳤다. 미납액은 총 11억 2,443만1천원이다.

지방청별 미납액은 서울청이 7억 9,158만1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 전체의 70.4%를 차지했다. 서울청에 부과된 전체 9억 1,991만1천원 중 86.1%가 미납됐다.

그 다음으로 경기북부청(8,342만1천원, 7.4%), 광주청(7,821만1천원, 7%), 충북청(7,050만1천원, 6.3%), 전남청(2,926만1천원, 2.6%), 부산청(2,641만1천원, 2.4%), 경남청(2,608만1천원, 2.3%), 인천청(1,000만1천원, 0.9%), 경기남부청(899만1천원, 0.8%) 순이었다. 대구청·울산청·대전청·전북청·경북청·강원청·충남청·제주청·경찰대학은 미납액이 없었다.

고액 미납자 비율도 서울청이 가장 높았다. 전체 미납자 43명 중 1억원 이상 미납자는 모두 서울청 소속(2명, 각 4억원, 1억원이었다)이며, 2천만원 이상 고액 미납자 총 13명 가운데 9명이 서울청 소속이었다.

경찰은 징계부가금 징수를 저조 원인에 대해 미납자 대부분이 파면이나 해임처분으로 퇴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용호 의원은 “징계부가금 징수현황을 보면 공직사회의 ‘제 식구 바자회’ 관행이 여전히 드러난다”며, “국민에게 최방방이, 제 식구에게 솜방방이를 대는 식으로 해서 공권력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진성 기자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우리 땅의 뼈대 백두대간의 모든 것

남원시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로 151
남원시 산림과 백두생태 063-620-6944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063-620-5751
백두대간생태교육장 트리하우스 063-620-5754

백두대간 역사관 3D 애니메트로닉스관
어드벤처 라이더관 5D 씨름영상관

하나 백두대간 달리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호랑이 라이더를 타고 백두대간의 자연을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코너

둘 백두대간 산간마을
백두대간 7천여의 삶의 모습과 주요마을들의 모습들을 영상으로 담아 현대인들의 메마른 정서에 추억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코너

셋 노치와 밤이
남원시 주천면 노치마을 당산제를 모티브로 노치소년과 백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흥미롭게 묘사한 360도 서울영상